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

2018년 3월 8일(목)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배포일시	2018. 3. 8.(목) 산경장 회의 종료 후
문의	담당자 붙임 리스트 참고 (관계부처 합동)

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 발표

◇ **(1단계)** 협력업체·근로자·소상공인 등 긴급필요에 대한 **신속지원** 추진

① 지역 자금난 완화를 위해 **약 2,400억 원 규모 유동성 공급 확대**

- **1300억 원** 규모 협력업체 **「특별보증 프로그램」** 신설
- **500억 원** 규모 **「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」** 신규 편성
- **지역신보 특례보증 600억 원** 확대
- 정책금융 **대출 1년간 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** 유예 (**시중은행권 대출**에 대해서도 만기연장 협조 요청)

② **세금·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** 등 비용부담 완화

③ 구조조정 등에 따른 **지역 실업위험에 선제적 대비**

- **희망센터, 고용복지플러스센터,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** 등을 통한 재취업 및 심리상담 통합서비스 **확충**
- 내일배움카드 **훈련비 자부담 인하**(**최대 80% → 최대 50%**)
- **경남 인력 잡매칭 뱅크 운영, 전북 고용안정화 기업컨설팅 및 취업연계** 등

◇ **(2단계) 관계부처 특별팀(TF) ↔ 지역 특별팀(TF)간** 소통 등을 통해 **지역 현장의견 폭넓게 청취**

⇒ 조선업 **특별고용위기업종** 연장 및 **산업·고용위기지역** 지정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, 지역별 **맞춤형 대책 조속히 마련**

◇ **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-고용위기지역 연계성 강화** 등 체계적인 지역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**법·제도 개선** 추진

□ 정부는 '18. 3. 8.(목)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**「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」을 발표**함

○ 이번 대책은 채권단 구조조정 방안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(통영) 뿐만 아니라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(군산) 지역을 대상으로 마련됨

□ 이번 대책은 ①근로자 등 직접대상자 중심, ②대체·보완산업 제시, ③신속·실질적 지원 등 세 가지 추진원칙을 바탕으로,

○ 근로자 지원, 협력업체 경영난 완화 등에 필요한 긴급 지원은 1단계 신속 지원대책으로 우선 추진하고,

○ 2단계 지역별 대책은 현장의견, 지역별 여건 및 요구사항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특화·맞춤형 대책으로 별도 추진할 계획임

Ⅰ. 신속 지원대책

□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의 위기로 인해 실업위험 증가 및 협력업체 경영난 가중 등이 우려되고 있어 **지역대책 수립 전이라도 필요한 지원을 위해 신속지원대책을 마련**하였음

※ 지원대상 : (전북 군산)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, 해당기업 근로자, 군산시 소상공인
(경남 통영) 성동조선 협력업체, 해당기업 근로자, 통영시 소상공인

1 협력업체 신속지원을 위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

○ **1,3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***을 신설하여 개별기업의 보증한도를 확대 지원

* 보증심사기준을 완화하고, 개별기업 보증한도를 최대 3억 원 확대, 보증비율(80~85%→90%) 및 보증료율 인하(1.2~1.3%→0.9~1.0%)

○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 등*에 대해 **1년간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**도 유예

* 산은, 수은, 기은, 중진공, 새마을금고 대출 및 신보, 기보 보증 대상

○ 해당 지역에 대해 **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40억 원 추가 배정**하고, 우대 조건을 적용(처리기간 단축, 융자요건 완화)

○ **세금 납부유예, 세금·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**, 관세 납부유예 등을 통한 비용부담 완화

○ 특히, 실제현장에서 협력업체가 자금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**정책금융기관 담당자 면책** 추진

○ 또한, **민간은행의 기존 대출**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과 원금상환 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

2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을 위한 **현장 밀착지원체계 운영**과 함께 **전직 및 재취업 훈련 지원** 확대

○ 희망센터(경남 조선업 근로자 중점지원)와 고용복지+센터(군산 전담팀 신설)를 통해 찾아가는 재취업 통합서비스와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

○ '상담-훈련-취업알선' 단계별 **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요건을 완화**하여 보다 많은 참여기회 제공

○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훈련참여시 자부담 비율 인하(최대 80% → 최대 50%)

○ 지역혁신 프로젝트 등 자치단체 차원의 일자리사업 적극지원

※ 경남 인력 잡매칭 뱅크 운영, 전북 고용안정화 기업컨설팅 및 취업연계 등

3 **해당지역 소상공인**을 대상으로 융자 및 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

○ **특별경영안정자금**을 **500억 원** 규모로 신규편성

※ 최대 7천만원, 최저금리 적용('18.1Q 2.94%→2.54%), 5년 상환

○ 지역신보의 **특례보증**을 400억 원에서 **1,000억 원 규모로 확대**

※ 업체별 보증한도 상향 조정(5천→7천만 원), 보증료율 인하(0.8%→0.5%), 보증비율 100% 적용

Ⅱ. 지역별 후속대책 추진

□ 정부에서는 1단계 신속대책 발표 후, 해당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직접대상자 등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마련할 계획임

○ 필요할 경우 **재정에서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**하겠음

□ 지역대책에 따라 정부의 각종 지원수단이 패키지 형태로 지원될 것이며, 주요 방향은 아래와 같으며, 이외 추가 과제도 적극 발굴 검토할 계획임

① 해당지역에 대한 **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**과 **고용위기지역** 지정, 또는 위기산업에 대한 **특별고용지원업종** 지정연장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검토될 것임

② 재정지원 등을 통해 **근로자의 재취업 및 전직을 지원**하겠음

*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확대, 훈련비 지원한도 인상, 해외진출 및 창업 종합지원센터 설립,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

③ 미래 신산업 및 문화·관광 등 **보완·대체산업 육성**을 지원하고, 지자체 **기업유치에 대한 종합지원*** 방안 마련 검토

* 기업유치를 위한 세제·금융·보조금 우대 지원 검토

④ 지자체의 **지역 회복계획 수립시 적극 지원** 검토

Ⅲ. 중장기 제도개선

□ **향후 추가 위기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**할 수 있도록,

○ **지역산업위기 모니터링** 체계 도입 및 범부처 지역산업위기대응단 구성 근거 등을 포함한 **위기대응 관련 법률 제정**을 추진하는 한편,

○ 산업위기 발생시 각부처 사업을 **패키지로 적기 지원**할 수 있도록 **신축성 있는 재원** 확보방안을 검토하겠음

Ⅳ. 향후계획

□ 신속 지원대책이 지역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**관계부처·유관기관 합동 현장설명회를 개최**할 계획임

○ 이후 정부는 **지역과 긴밀한 소통**을 통해 지역대책을 마련할 것이며, 그 과정에서 상향식 의사전달, 지역과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감안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임

□ 아울러, 이번 신속 대책발표와 별도로 정부는 한국지엠(GM)의 경영상황 파악을 위한 **객관적인 재무 실사를 진행**하고, 이를 토대로 한국**지엠(GM) 정상화 방안 협의를 지속**해 나갈 계획임

【붙 임】 1. 관계부처 담당자
2.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황승완 사무관(☎ 044-203-442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【붙임 1】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

◇ 「지역 신속지원대책」 관련 **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**이 있는 경우, 아래 **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 당 부 서		담 당 과 장	담 당 자
국조실	산업통상정책과	윤현주(044-200-2211)	조성래 사무관(044-200-2212)
기재부	지역경제정책과	천재호(044-215-4570)	정혜경 사무관(044-215-4571)
교육부	기획담당관	김영진(044-203-6636)	임소희 서기관(044-203-6638)
행안부	지역경제과	황상규(02-2100-3890)	김지은 서기관(02-2100-4205)
산업부	지역경제진흥과	정경록(044-203-4420)	황승완 사무관(044-203-4422) 염현호 사무관(044-203-4454)
복지부	기획조정담당관실	황의수(044-202-2310)	정연희 서기관(044-202-2304)
고용부	지역산업고용정책과	김형광(044-203-7404)	구현경 사무관(044-202-7405)
국토부	기획총괄과	황윤언(044-201-4546)	위은환 사무관(044-201-3203)
해수부	기획재정담당관	이수호(044-200-5120)	권영규 사무관(044-200-5121)
중기부	정책총괄과	박종찬(042-481-4537)	김민수 사무관(042-481-4543)
금융위	산업금융과	안창국(02-2100-2867)	이한샘 사무관(02-2100-2861)
국세청	징세과	이한종(044-204-3001)	이주희 조사관(044-203-3014)
관세청	심사정책과	손성수(042-481-7860)	윤청운 사무관(042-481-7864)